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현장 '혼선'

충전 안 하고 '주차만 해도 제재' 법적 근거 없어 장시간주차 입증 민원인 뭉...시행 한달 현장단속 0건 주차 시간 측정 등 허점투성이...관계자 "개선 시급"

광주시가 지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일선 현장에선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해도 즉각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행위'를 신고한다고 한들, 이를 민원인이 입증

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때문에 일선 자치구 관계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충원과 더불어 구체적인 단속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징수가 시작됐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제 7·8·9항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행위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 행위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행위 ▲충전시설 훼손 행위 ▲충전구역 표시물 훼손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행위'엔 '완속 충전' 시설에선 14시간 이상 주차, '급속 충전' 시설은 1시간 이상 주차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과태료는 위반 행위를 목격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면 자치구 관계자가 이를 확인, 부과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7월 한 달 간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선 ▲광산구(115건) ▲남구(80건) ▲북구(74건) ▲서구(45건) ▲동구(0건) 순으로 과태료가 징수됐다. 아직까지 현장 지도단속반의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으며 동구의 경우 접수된 61건의 민원에 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적발된 위반 행위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시간 주차 행위'의 경우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워 과태료 징수로 이어진 건 5개 자치구 중 단 1건(서구) 뿐이었다. 민원인이 위반 의심 행위를 신고해도 전기차량이 14시간 이상 주차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의 허점도 드러났다. 현행법대로라면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주차만 해도 무관하다. 또 주차 14시간을 채우기 전, 잠깐이라도 차를 뺐 뒤 주차하면 다시 14시간을 뺄 수 있다. 14시간 이상의 기준이 1일 누적 아닌, '연속 14시간'이라 '1초'라도 차를 뺐다면 다시 처음부터 주차 시간이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사유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업무를 단 1명에서 맡고 있는데, 신고 처리와 현장 점검 등을 모두 전담해야 해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며 "자치구 차원에서 현장 지도와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도 완속 충전 시설의 경우 위반을 판단하려면 14시간 이상 지켜봐야만 해 사실상 현장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제도 자체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제도 시행이 현장 인력 충원 없이 시행되다 보니 업무에서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 근절을 위해서 관리 인력 충원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인재영기자

후배 성폭행 시도했던 그 경찰서 또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

경찰, 진상조사 착수... "사실 여부 가려내겠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남 한 경찰서 A경위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찰조사는 직장내 성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경찰청 인권조사계에서 담

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내 성비위 의혹만 국과수 감사 결과와 추후 통보받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인들의 사망원인 및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양 가족은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선 수사에서 유나양 부모가 광주 한 의료기관에서 2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실제 유나양 어머니가 지난 4월, 5월 각 1차례씩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이 밝혀졌다. /김다인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배상 강제집행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김다인기자

진도서 뺑소니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뀌기 40대 들뜸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법인 도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32분께 진도군 한 마을에서 편도 1차로를 보행하던 B(70대)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무면허였던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뒤 50대 지인 C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죄 행위는 교통 조사관들이 피해자 B씨의 사체를 검시하던 중 드러났다. 운전자라 주장하던 C씨의 사고 진술과 피해자의 충격 부위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진도=박세권기자

경찰, 조양 일가족 극단적 선택 결론

추락 후 레버 변경 추정...차체이상·공소권 없음 고려

지난 6월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광주 남구 거주 초등학생 조유나양과 조양의 부모에 대해 경찰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일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검결과, 조양과 조양 부모에게 수면유도제와 수면진정제 등 치료 농도 범위 내 수면제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직접 사인으로 의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또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을 토대로 조양 일가족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지난 5월31일 오전 10시56분께 시속 31km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변속레버는 해상 추락 후 P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했다.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어린 조양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씨 부부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조씨 부부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국과수 감사 결과와 추후 통보받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인들의 사망원인 및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양 가족은 지난 5월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뒤 29일 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선 수사에서 유나양 부모가 광주 한 의료기관에서 2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실제 유나양 어머니가 지난 4월, 5월 각 1차례씩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이 밝혀졌다. /김다인기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 권리 묵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기자회견서 정부 비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외교부가 일 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을 놓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곧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달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시민모임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면담에서 광주에 있는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와 대리인

의 민관협의회 참여를 요청했으며 지난 달 26일 양극덕 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된 상표권·특허권 특별연금과 명령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시민모임은 민관협의회 출범 의도와 외교부의 대외 저자세 외교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관계자는 "강제집행명령이 강금덕, 김성주 할머니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모두에게 외교부의 의견서가 영

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며 "사법부가 이와 상관없이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미쓰비시 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상고건 2건과 특허건 2건의 압류 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대위변제"를 논의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가 먼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배상하고 이후 일본으로부터 비용을 받아내는 '대위변제'를 논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관공동협의회, 300억원 기금 조성에 가해 기업을 불참시키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다인기자

여수 어선 7척 계류줄 끊겨 표류

여수 신북항에 피항해 있던 어선 7척이 바지선 계류줄이 끊어지면서 표류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6분께 여수시 신북항 계류지에서 바지선과 함께 어선 7척이 표류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소형(1~3급) 어선 7척이 계류바지와 함께 표류해 3급 어선 A호와 1급 어선 B호가 잔교 하부에 걸려있었다. 해경은 태풍 피항 차 신항 바지선 이 동해 계류 중이었고 바지 계류줄이 끊어지면서 어선들과 함께 표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안전기원제 고사
▶ 시 제 상
▶ 제 사 상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